

현장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하자

글 | 최순자 _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교수 sjchoe@inha.ac.kr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최악의 신용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원유 값이 13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값의 폭락이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 근교의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을 버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원유 값 상승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지지만 미국 달러화의 약화, 에너지 수요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 투자자들의 투기, OPEC의 오일 증산 계획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시스템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지난 5년 간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 대한민국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최근 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출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은 물론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의 실업률이 3.4%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더욱 극심하여 7.5%에 이르고 있다. 최근 보도된 한국의 대출 취업률이 76.8%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3.7%와 3.8%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은 각각 0.5%와 0.6%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일자리는 크게 인프라구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에 의한 방법은 SOC 등 사회 사업을 벌여야 하므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지금 경제도 어

려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흑자 재정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역대정부의 많은 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과거의 그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전략적·생산적·현장 중심적 실천 방안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최악의 한국 대졸 고용 보도를 접하면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에 패키지형 R&D 지원 필요

첫째, 생산적·효율적 재정 운용이다. 우리나라 2008년의 분야별 재정은 사회복지·보건이 67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이 46조1천억 원, 교육 35조5천억 원, 국방 25조9천억 원,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이 19조2천억 원순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예산의 25.6%가 사용되는 분야인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 취약계층과 노동 등에 사용되는 재정을 아무런 보상 없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이끌어내는 재정 지원이라면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자야낼 것이다. 이 밖에도 모든 재정 운용에서 그냥 나누어주는 돈이 아니라 생산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적극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인 패키지로 만들어 기술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역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지난 5~10년 간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예산, 기술,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었다. 가령 1년 간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기도 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 대하여 6개월 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6개월이나 1년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소기업은 중견이나 대기업에 비하여 인력, 기술력, R&D 능력 및 자금이 부족하므로 일정 예산으로 기술성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급인력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지원이 필

요하다. 또 다른 중소기업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 중 기술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이다. 이들의 기술력은 그들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도·지원했으며 함께 연구개발을 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성공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요인을 점검한 후, 정부는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해 주면서 고용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2008년 분야별 재정

재정분야	예산(조원)	비고
R&D 분야	10.8	과학기술 4.0, 산업·중소기업 2.9, 국방 1.5, 농림해양수산 0.7, 정보통신 0.8, 기타 0.9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19.2	SOC 16.1 (도로 7.8, 철도 3.7, 도시철도 1.3, 항공공항 0.2, 해운항만 2.1, 물류 등 기타 1.1), 지역개발 3.1(수자원 1.7, 지역·도시 0.4, 산업단지 0.3)
산업·중소기업	12.6	산업진흥·고도화 3.6, 무역 및 투자유치 0.4, 산업금융 3.2, 에너지·자원개발 4.4, 산업기술 0.6, 산업·중소기업 일반 0.4
농림·수산	16.4	농업농촌 13.1, 해양수산어촌 2.0, 임업산촌 분야 1.3
정보화	3.5	
사회복지·보건	67.7	사회복지분야 61.7(기초생활보장 6.9, 취약계층 지원 3.5, 공적연금 21.4, 주택 14.7, 노동 10.5, 여성·보육 1.6, 보훈 3.1), 보건분야 5.9(보건의료·식약안전 1.3, 건강보험 4.6)
교육	35.5	유아 및 초중등 부문 30.8, 고등교육 4.3, 평생·직업교육 0.4, 교육일반 0.1
환경	4.5	상하수도·수질 2.9, 폐기물 0.3, 대기 0.4, 자연 0.3, 해양 0.1, 환경보호일반 0.5
문화·관광	3.2	문화예술 3.2, 관광 0.8, 체육 0.5, 문화재 0.4, 문화 및 관광일반 0.2
국방	25.9	병력운영 9.9, 전력유지 8.1, 방위력 개선 7.7, 병무행정 0.2
공공질서 및 안전	11.7	법원 및 헌재 1.3, 법무 및 검찰 2.2, 경찰 7.0, 해양경찰 0.8, 재난방지 민방위 0.4
통일·외교	2.8	통일 1.2, 외교 1.6
일반공공행정	46.1	일반행정 4.1조, 입법 및 선거관련 1.1, 재정·금융 11.5, 지방행정재정지원 29.6
총계	259.9	

방과 후 교실에 미취업 젊은 교사 활용

세 번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바로 교육현장을 통한 것이다.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 사업의 교실 현장에서는 서울의 경우 학원 강사가, 지방에서는 그 학교 교사나 예·체능 특별과목의 경우 학원 강사들이 하고 있다. 방과 후 교실에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시간제로라도 고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학원 강사보다는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전략이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어민이나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모집에 외국에 있는 한국인 자녀를 모집하였다. 지난해 2학기에 이미 학교 현장에서 대학생이나 미취업 젊은 교사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이왕이면 국내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현장 사정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무 방법은 더 고민을 하고 다듬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잘 안된 것은 그 원인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해안이 필요하다. **ST**



글쓴이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사랑여성모임 대표,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WISE 인천센터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